

[종합]

“외국인도 함께 사는 제도 만들겠다”

노대통령, 오늘 ‘외국인정책회의’ 주제 불평등 해소 등 처우 개선책 논의할 듯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국내 외국인 정책과 관련, “절차 우리 이민법을 완화해 한국에 와서 오래 노동하고, 어 울러 자낼 수 있도록 이민정책을 새 로 다듬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원군 현 도면 방문,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 들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로 는 전제적으로 외국인 정책을 상당한 자 신감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국인도 함께 사는 제도 만들겠다

노 대통령은 이날 “우리 한국 국민 도 앞으로는 색깔,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들 하고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제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적이 의한 차별 등을 금지하는 ‘외국인 처우에 관한 기본법’ 제정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 서 “지금까지 외국인 인권 문제, 생활 문제,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 등이 종 합적으로 검토된 적이 없다”며 “하 인스 워드 선수의 방한을 계기로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져 정책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을 만한 관 위원회로 각 부처에 분산된 외국 인 정책이나 업무를 통합 조정하는 역 할을 맡게 된다.

박지원씨 ‘알선수재’ 등 징역 3년 현대 비자금 150억은 무죄

고법 파기환송심서 법정구속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현대 비자금 150억원 수수’ 혐의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에 대해 실형 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로 예정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수행 계획은 사실상 무산될 것 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5면]

박지원씨 ‘알선수재’ 등 징역 3년 현대 비자금 150억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2부(이재환 부장판 사)는 25일 ‘현대 비자금 150억원 수 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150억원 수 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남 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는 인정해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박 전 장관은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달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의 유 죄를 주장하며 징역 20년에 추징금 148억5천여만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50억원 수수 혐의 입증 을 위해 검찰이 제시한 영상사진 진



법정구속된 박지원씨

술서와 관련, “박씨 와 이해관계가 상반된 김경완 씨의 진술 을 토대로 한 것으로 형 사 소 송 법 상 증거 능 령 이 인 정 되는 특 신 상태(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며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대법원이 (현대 비자금을 관리했다) 김경완 씨 진 술 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하면서 제 시한 ‘본인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영사신문이란 외국인의 특정 한국영 사관을 지정해 그 곳으로 증인이 자 진 출두해 신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달라이 라마 개인자격 방한 종교·평화 행사 참석 바라”

대리인격인 초폐씨, 광주시 방문 협조 요청

광주를 방문한 ‘달라이 라마 동 아시아지역 연락사무소’ 대표인 ‘초폐 팔러 체링(58·Chope Paljor Tsering)’씨는 25일 “달라이 라마

비자와 관련해 한국정부로부터 공 식이든 비공식이든 어떠한 입장 도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초폐씨는 이날 오전 국립 국민



달라이 라마 대리인 ‘초폐 팔러 체링(오른쪽)’씨가 25일 2006노벨평 화상수상자 광주정상회의 개최 장소인 김대중컨벤션센터를 방문, ‘김대 중홍을’을 돌려보고 있다.

열차시험운행 일방 무산 관련 정부, 복측에 “유감” 통지문

정부는 25일 복측이 경의선·동해 선 열차시험운행을 일방적으로 무산 시킨 것과 관련, 대북 통지문을 복측 에 보내 유감을 표시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북위원장 박병원 재경 부 차관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남북 당국자 합의에 따라 온 거래의 기대 와 관심 속에 25일 진행될 예정이던 열차 시험운행이 복측의 일방적 연 기로 이뤄지지 못하게 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고 통일부 당국자가 밝혔다.

운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부행 사 계획까지 합의한 상황에서 군사적 보장 조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 어 행사를 하루 앞두고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복측의 태도는 어떤 설명으 로도 납득될 수 없는 처사라고 강조 하고 ‘군사적 보장조치가 마련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복측 에 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열차 시험운행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지도록 ‘성의있는 조 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안팎으로 체면이 말이 아니다

Table with 3 columns: 사번번호, 신청인, 목적. Lists various public notices and administrative matters.

Table with 3 columns: 사번번호, 신청인, 목적. Lists various public notices and administrative matters.

Table with 3 columns: 사번번호, 신청인, 목적. Lists various public notices and administrative matters.

Table with 3 columns: 사번번호, 신청인, 목적. Lists various public notices and administrative matters.